

통합특별법 '교육자치 강화'... 막강 권한 견제장치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편은 교육 자율성 강화와 지역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 지원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특별시교육감에게 대폭 이양된 데다, 관할 구역도 두 배로 늘어나면서 교육감 권한이 막강해진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교육자치 관련 법안은 1개 편(編), 3장(章), 20조(條)로 구성됐으며, 행정통합에 따라 현재 별도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 교육청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 1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 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특별시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전체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운영할 수 있다.

행정통합 갈등의 뇌관인 주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시교육청도 규정하지 않았으며, 특별시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 또는 지역 거주자 등

특별시교육감 1명 선출·부교육감 3명 임명 직원 승진·인사 종전 방식 유지 '신분 안전'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권한 교육감에 이양

을 대상으로 신규 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전 논란이었던 인사 교류와 승진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지 유지를 명문화했다.

특별시 설치 전 임용 및 선발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했으며,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는 종전 관할 구역별로 분할해 작성하며 선택가산점 종류·적용범위·기준을 종전 관할 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별법은 교육자치 확대 취지에 따라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교육부장관 권한인 영재학교·특

수목적고·공립대안학교·외국학교법인·교육국제화특구 지정·설립을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했다.

지역 교육계가 자율학교 관련 조항이 특권교육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이 막대한 만큼 별도의 교육의회 구성이나 기초자치단체처럼 지역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에는 특별시의회의와 22개 시·군 단체장이 있어 견제와 균형을 조율할 수 있지만 특별시교육감은 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원 외에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학교와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전남의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등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교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학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또는 캠퍼스 조성·운영도 가능해졌다.

학부모들이 주목하고 있는 학군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고 입학 전형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한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시교육감은 광주·전남의 역사적 특수성인 임진·정유역병, 동학농민혁명, 한말 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순천 10·19사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내 처리될 예정이다.

/오권철 기자



연일 금값이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가짜 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광주 동구 귀금속거리 한 금은방에서 이영관(사)광주귀금속보석기술협회장이 진품 금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

치솟는 금값에 '가짜 금' 경보 광주 귀금속거리 '초긴장'

연일 치솟는 금값에 더해 '가짜 금' 유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광주지역 금은방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사)광주귀금속보석기술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에 이어 최근 부산에서도 가짜 금 유통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련 내용이 협회 전국 지부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다.

대체로 판매자로부터 매입한 골드바 등을 금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 정련하는 과정에서 순금 외 이물질이 섞여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특히 텅스텐이 섞인 순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텅스텐은 밀도가 19.25g/cm³로 금(19.3g/cm³)과 거의 같아 레이저나 엑스레이 등 비파괴 검사로는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협회가 최근 확인한 가짜 금 유통 사례는 부산에서 유통된 중국산 30돈 짜리 팔찌다. 해당 팔찌는 감정소 감정 결과 금 순도가 99.8%로 측정됐고, 녹였을 경우에도 99% 수준이 유지됐다.

그러나 가공을 위해 정련한 결과 회수율이 65%에 그치면서 이물질이 섞인 가짜 금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외국인 판매자들이 이 같은 가짜 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과 세관에 신고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가짜 금 유통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다른 금속 주괴의 결면을 금으로 감싼 형태의 가짜 골드바가 유통돼 대체로 잘라보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금 정련 과정까지 거치지 않고서는 골드바 속 이물질을 가려내기 어려워 외형과 중량만으로 거리가 이뤄질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뚜렷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업계는 이미 시중에 가짜 금으로 제작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은방 관계자들은 가짜 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판매 일자와 신분증, 개인 연락처, 신상착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야 거래를 진행하며 가짜 금 유통 차단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도 가짜 금을 가려낼 기술적 진전이 없는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짜 금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신뢰 훼손은 물론, 업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조만간 관련 캠페인에 나서 지역 내 가짜 금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소매점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판매원들이 가짜 금 경보 내용이 담긴 락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관 협회 광주지부장은 "가짜 금이나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을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금은방들은 오히려 불황을 겪고 있다. 매출이 사실상 반 토막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짜 금까지 유통되면서 금을 매입해 정련하는 기술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전민규 기자

9년 전 대학 재학 당시 과 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법원이 '의심 정한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수도권 모 대학 내 모처에서 술 취한 대학 동기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B씨의 고소 사실 등을 토대로, A씨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B씨

9년 전 대학동기 성범죄 혐의 기소 30대, 무죄 왜?

“피해 진술 의심 정한만 있고 객관적 증거 확인 못해”

와 돌만 있게 되자 만취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았으며 6년여가 지난 2023년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A씨는 술자리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6년여가 지난 고소로 CCTV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돼 확인하기 어렵다.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B씨는 2017년께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고 고내 상담까지 받아 A씨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성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B씨가 전문가 심리 상담

중에도 '추행' 피해만 말했던 것으로 보여 실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사건 당일 다음날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성폭행을 추단(정황에 미루어 판단)할 정황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자리 동석 사실이 인정되고 둘 사이에 성적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긴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

“코인 투자 실패에 주민 환급금 손땀다” 무너진 공직 기강

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다 주민 환급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불과 두 달간 6차례 반복된 횡령에도 시스템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부실은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가족수당 부당수령 등 73건 행정조치와 23명 징계 요구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 A씨는 2025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3200여만원을 6차례에

광주 서구 공무원 두 달간 6차례 걸쳐 수천만원 횡령 서구, 광주시 감사서도 23명 징계 요구·73건 행정조치

걸쳐 빼돌렸다.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지방세 반납·양도 절차를 악용, 허위 양도신청서와 타인 신분증 도용으로 차명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횡령은 A씨가 연말 결산 과정에서 부서 과장에게 실토하며 드러났다. A씨는 직위해제 됐고 징계와 경찰 수사 의뢰를 앞두고 있다.

두 달간 반복된 횡령에도 부서 책임자

인 팀장과 과장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는 환급 절차의 취약점(단순 서류 확인)과 실시간 감사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형식적 내부 통제만으로는 공공 관리의 근본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서구는 A씨가 횡령 사실을 실토하고 나서야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업무 적정성을 전수조사 중이다. 또 행안부 지방

세입정보시스템 및 내부 업무 구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계좌의 거래 내역과 집행 잔액 등 수시 결산을 통한 세정업무 처리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서 지난달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크고작은 비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광주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서구 종합감사'에는 개발부담금 12억5292만원 미환수(11건), 가족수당 부당수령,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3575만원 미환수, 업무시간 검칙 영리활동(블로그 운영), 강제금 체납 방지(7604만원), 취득세 미부과(4285만원) 등으로 23명 징계 요구·73건 행정조치를 내렸다. /박서우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